

# 국가재정 투입 편중 심화...수도권·지방 격차 더 커진다

##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개편 왜 시급하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효율과 경제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경제성장지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오히려 잘 사는 지역에 편중되도록 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 특히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역낙후 지수를 포함시키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과거 논리에 사로잡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혁신을 주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타, 정부 공모 '균형발전지표'가 가장 우선돼야=국가 재정이 인구, 경제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예타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문제인 정부가 예

## 수도권 88% 통과, 비수도권 78% 탈락

잘사는 지역 유리 지역 양극화 불러  
균형지표·낙후지수 중요 기준 돼야  
정치권, 주체 변경 등 개편 움직임

타에서의 지역낙후도 중시, 예타 면제 사업 선정,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뉴딜 추가 등 균형발전 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타, 정부부처 공모 등에 있어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지역혁신역량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을 보다 낙후한 지역에 전략 배치하는 등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한 국비 매칭 비율 조정, 재정 분권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점차 고착·심화되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영남·충청·호남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예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영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예타 제도를 대체할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주장한데 이어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예타의 수행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가 예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9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만큼은 '예타 대상금액의 증액'이나 '점수 배점 조정'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센터(PIMAC)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총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비수도권 사업이 21개(77.8%)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은 2015~2020년 총 34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28개가 타당성을 확보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다.

◇정치적 입김 작용, 수도권만 유리 등 부작용 개선 시급=예타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사업성 없는 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과 수도권

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인구, 기업, 기관 등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예타, 정부 공모 등의 기준을 바꿔 쇠락하는 지역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재정 투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예타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도록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재정 투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과 경북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지방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 적용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또는 축소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는 만큼 이 같은 개별 입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구광모 LG 그룹 회장(왼쪽),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4대 그룹 대표 이재용 사면 건의에 문 대통령 "고충 이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

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경제계의 고충을 짚는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업·경제계가 갖는 고충 및 역할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놓고 앞으로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이번에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갔다"고 평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5·18 직전 미 대사관 보고서

### "전두환이 실세...최규하는 무기력"

미국무부 문건 14건 추가 공개  
발포 책임자 등 내용은 없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또 광주에서 평화 봉시단으로 활동하며 참상을 알린 인물인 닉 크리스티슨의 본명이 밝혀졌다. 그는 광주항쟁이 '지역감정에 의한 사태가 아니고 광주가 폭도에 의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2일 미 국무부가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외교문서(14건·약 53쪽)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도 포함됐다.

이 전문은 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두환에 대해 "군부 내에서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당시 전두환의 계급은 소장에 불과했지만, 군부의 실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무기력한 대통령'(HELPLESS PRESIDENT)이라고 표현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인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 고립된 상황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하 대통령뿐 아니라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도 실권이 없음을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1980년 1월10일 주한 미 대사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2·12 사태 후 국방부 장관이 된 주 장관이 방한한 래스터 울프 미 하원의원으로부터 "우리는 한국군의 안정을 바라며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신을 돕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미 정부가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 정황도 외교문서에서 확인된다.

미 국무부가 1980년 3월13일 작성된 문서에는 윌리엄 클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전두환 간 면담 내용이 담겼는데, 국무부는 "전두환이 이번 만남을 올리브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그의 높아진 위상을 수용하고 당신(미 대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전두환이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부가 지적한 것"이라며 "전두환과 접촉하면서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미국에 모두 문서 80건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작년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첨단우리병원**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